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의료비 리스크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2006년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4차례에 걸쳐 표준상품이 나왔으나 아직도 도덕적 해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실손의료보험의 거래구조에서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제3자인 의료공급자와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은 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가 법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는 1963년 12월 16일에 입법된 제정 「의료보험법」에서 보험자의 요양기관 지정신청권을 인정한 데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70년 8월에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다시 1979년 4월에는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보험자 또는 보험자로 구성된 단체가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하도록 하고, 지정할 때 필요하면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또는 기타 의약관계단체와 협의하도록 하며, 보건사회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요양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1981년 4월의 「의료보험법」 개정 시에는 보건사회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보험자 또는 보험자로 구성된 단체가 지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지정 권한을 보험자단체에 위임할 수도 있게 했다. 그 후 1999년 2월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면서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강제지정을 하였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수가는 원칙적으로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가 계약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급여를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자 역할을 분담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공급자를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음에 반해, 비급여 등을 보장하는 실손의료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는 그러한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고작 할 수 있는 기능은 진료내역을 확인하고 행해진 진료가 보상범위에 속하는

지 확인하는 정도이다.

물론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관계를 맺는다고 하여 국민건강보험에서 도덕적 해이가 완전하게 해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 사전적으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관계를 맺는 것은 진일보한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가 서로 관계를 맺으면 도덕적 해이의 방지 외에도 의료비를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실손의료보험의 공급체계는 보험자인 보험회사 등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그리고 의료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의료기관 등(이하, '의료공급자'라 함)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체계에서 이 보고서의 연구 목적은 보험자인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찾아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 범위는 이론적 검토, 해외사례 조사, 국내의 정책 및 법률적 제약 요인 검토, 정책 및 법률 개선방안에 걸쳐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 이어 Ⅱ장에서는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 및 쟁점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는 주로 이론적 측면과 정책분석을 행한 최근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나아가 이들 연구를 살피면서 드러나는 논점을 분석한다. Ⅲ장에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관계 유형과 주요 사례를 미국·네덜란드·일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관계 유형은 유형별 특징 및 장단점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사례는 실제 운영되는 사례를 인용하여 소개한다. Ⅳ장에서는 미국 등의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연계를 무엇이 막고 있는지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보험회사와 의료공급자 간 연계 방향과 그를 위해 해결해야 할 제도적 개선과제에 관하여 논한다.

위와 같은 내용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인터넷을 통한 자료조사를 하고 제도적 분석을 하는 방법을 취한다.